도, 세계한인회장대회서 협력 사례 발표

도-재외동포사화와의 연대 협력 강화 · 협업 성과 공유… 김관영 지사, 재외동포사회와의 미래 협력 의지 밝혀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외동포청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올해 처음 신설된 지자체-재외동포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법정 기념일인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을 기념해 전 세계 한인회장과 국내 초청 인사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재외동포 협력사업을 소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운영 △고려인 중앙아시아 문화이해 증진사업 △재일전북도민회와의 교류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조례 제정 등이다.

특히 올해 세계호남인의 날 전북 개최, 동포 2세 초청사업,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국제교류 확대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재외동포청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처음 신설된 지자체-재외동포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북과 전 세계 재외동포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재외동포의 정체성 회복과 자긍심 고취, 차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 곳곳에 뿌리내린 동포들과 손잡고, 지역과 세계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모국과 동포사회 간 연대성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해 전 세계 한인회장들을 초청해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행사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지방의회 틀 만들겠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 수석 부회장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돼 임기를 시작했다.

문 의장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다 타 시도의회의장들과의 유대관계가 좋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 만장일치로 수석부회장에 선출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공동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기구이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할 안건이 많다"며 "지방의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임기내 꼭 완수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추석 연휴 문화시설 295곳 문연다… 전시 · 체험 · 축제 '한가득'

박물관 28곳 · 미술관 15곳 · 도서관 55곳 · 체육시설 142곳 개방

전주 낮달마실 · 도립미술관 특별전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올 추석 연휴에 도내 문화시설 295곳을 개방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관광지, 체육시설이 고루 포함돼 도민과 귀성객, 관광객이 명절에도 다양한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휴 동안 문을 여는 시설은 박물관 28곳, 미술관 15곳, 공공도서관 55곳, 주요 관광지 28곳, 작은영화관 9곳, 공공체육시설 142곳 등 모두 295개소다.

도립미술관은 특별전 '진격하는 B급들'과 체험형 전시 '아이스크림 똥', 기증소장품 상설전 '고귀하고 고귀한Ⅱ'를 마련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왕실 청화백자와 고려청자 특별전을 동시에 선보이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근대 도시의 생활사를 재조명하는 기획전을 연다. 남원 김병종미술관은 현대미술 협력전으로 지역의 예술적 감각을 더한다.

완주 책박물관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55개 공공도서관도 문을 연다. 일부는 열람실만 개방된다.

전주 경기전과 남원 광한루원, 김제 벽골제, 고창읍성 등 대표 관광지와 작은영화관 9곳도 정상 운영된다. 전주 화산체육관, 전주빙상경기장, 익산주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142곳 역시 가족 단위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시·군 박물관은 추석 당일 휴관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문화시설 개방과 함께 명절 분위기를 더하는 행사도 다채롭다.

전주에서는 세시풍속 한마당 '낮달마실'(10.3.~10.9.)과 전주공예품전시관 '한가위 한마당 들썩', 경기전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이 이어진다.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10.2.~10.4.)과 전주천년한지관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가수 남진의 전국투어 콘서트(10.4.)가 열려 명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익산에서는 마한문화대전(10.3.~10.5.)과 백제왕궁 소원페스타(10.5.)가 진행된다. 김제지평선축제(10.8.~10.12.)는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과 공연을 마련하고, 부안에서는 추억의 가요 콩쿨대회(10.5.)가 열려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추석 직후인 10월 11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훈민정음 창제 579돌을 기념하는 '2025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가 열린다. 기념식과 시상, 음악회, 성인문해 전시, 한글 소망쓰기 퍼포먼스가 준비되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9.26.~10.26.)와 연계한 서예 퍼포먼스와 전시도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납세자 권익 보호 조례 개정 추진

최형열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과 체납처분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북의 경우 팀장급 인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무 내용이 상담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실제 전북도의 운영 실적을 보더라도 세무 상담이 전체 실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7월 기준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전체 54건 중 세무상담 47건) 이에 대해 최형열 위원장은 "납세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는 인지도도 낮고, 권한 범위 또한 협소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기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 선정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단순 상담을 넘어 불복 절차를 위한 구체적 권한을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유사한 법률개정이 있었던 만큼, 전북도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세 선정대리인이란 납세자가 불복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대리인을 마련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거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등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한편, 최형열 위원장은 이러한 사항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가오는 제422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추석 명절 앞두고… 축제 ·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대규모 지역축제 사전 점검 ·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합동점검 실시… 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주요 축제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축제가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시·군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다중 운집 인파 관리 대책 △시설물·전기·가스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 등이다.

특히 추석 기간 중에는 '김제 지평선축제(10.8.~10.12.)', '임실 N치즈축제(10.8.~10.12.)', '군산 시간여행축제 &짬뽕축제(10.9.~10.12.)'가 동시에 열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북도는 사전점검을 강화해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운영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명절을 앞두고 철도역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시·군과 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승강기 188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승강기 작동상태 등 이상 유무 △자체 점검 실태 및 위험요인 관리 여부 등으로, 지적 사항은 관리주체에 즉시 시정토록 지도해 추석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과 귀성객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2026년도 생활임금 3.3% 인상된다

최저임금보다 20.25% 높은 수준인 1만2400원 결정

396원 인상… 약 839명 혜택 · 지역경제 활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4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396원(3.3%)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약 259만3,690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 제도로, 전북특별자치도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시행해왔다. 2018년 첫 적용 당시 8,600원에서 시작해 매년 최저임금·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생활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꾸준히 조정해왔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위원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쳤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약 839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활임금은 2026년 기준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추석 연휴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 대책과 긴급대응태세를 강화하며, 도내 전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는 2일 오후 6시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주요 간부를 비롯해 전 직원이 비상응소태세를 유지하며,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소방장비를 100% 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개천절과 한글날과 맞물려 열흘 가량으로 늘어난 추석 연휴 기간 역·터미널 등에 다중 인파가 운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주역 등 24곳에 차량 31대, 인력 134명을 사전에 배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은 하루 2회 예방순찰을 실시하며,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 화재에 따른 소방 관련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해, 소방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복구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친환경 · 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브 협의체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1일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혁신허브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하천 · 계곡 내 불법 정용 행위 근절

민주 한병도 의원, 소하천정비법 개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국의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자료 분석 결과, 9월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799건의 불법 시설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원상복구 및 철거 조치 없이 미조치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자료를 통해 휴양지와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이나 평상 등의 시설이 대거 확인되었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전남 85건, 강원 83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을 포함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내에서도 총 43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하천 정비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전북 지역의 불법 시설 유형은 불법 경작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상 및 그늘막 설치가 10건, 가설 건축물이 5건을 차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처럼 미조치된 불법 시설의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 신설,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제도적 정비 등이 있다. /이만호 기자

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힘 모은다

도 · 시군, 유관기관 · 단체 간 협력 강화 · 대책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과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관련 부서, 전주기상지청, 전북경찰청, 육군 제35보병사단, 한국도로공사, 유관기관 및 대한건설협회,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14개 시군이 참석해 역할과 임무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상 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었다. 정부의 책임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춰 각 기관은 본연의 임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폭설 발생 시 도로 관리 주체별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에 집중하고, 제설 취약 구간과 상습 결빙 구간 재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파손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한파 특보 시에는 한파쉼터를 24시간 개방하며, 농축수산물 보호와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협력해 11월 14일까지 재난 대응 준비를 철저히 마무리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